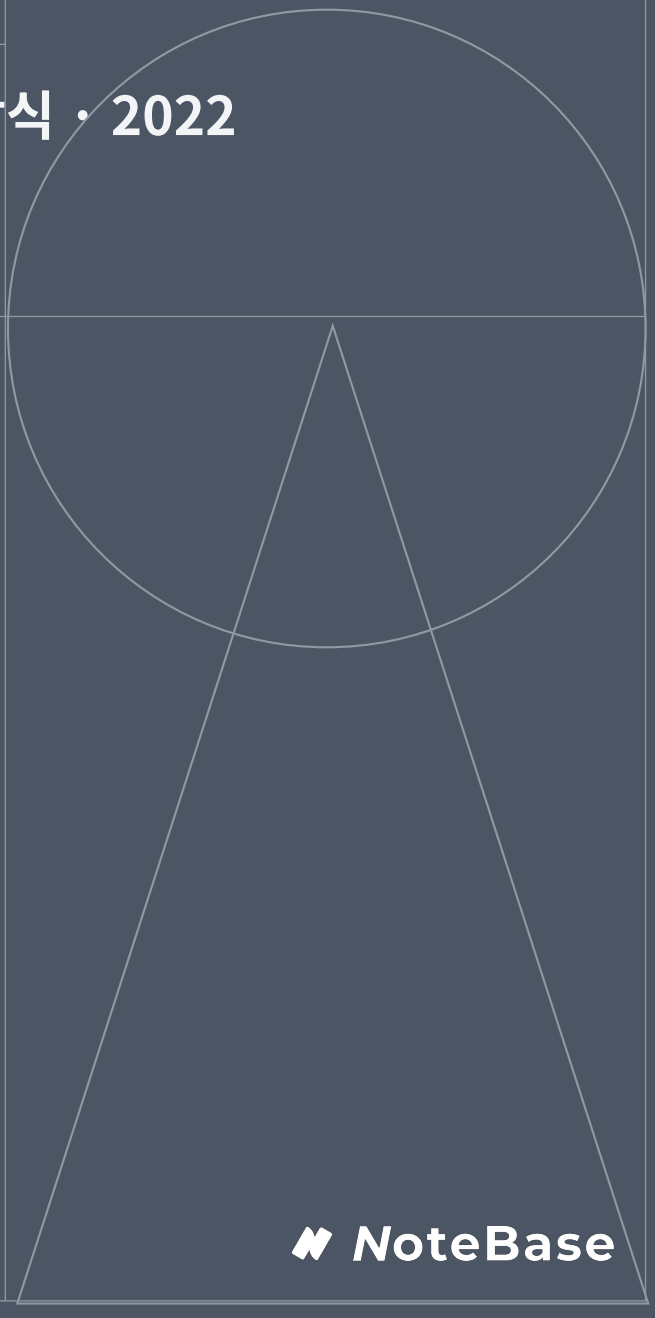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상식 · 2022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상식 · 2022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상식 · 2022**

문 1.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상우편물 요금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집배코드는 도착집중국 3자리, 배달국 2자리, 집배팀 2자리, 집배구 2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③ 우체국과 협의되지 않은 우편요금 표시인영은 표기할 수 없으나,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할 수 있다.

④ 집배코드란 우편물 구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코드로서, 문자로 기재된 수취인의 주소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숫자로 변환한 것이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우편물의 외부표시 사항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우편번호와 집배코드의 개념·구성, 우편요금 감액을 위한 제출 방법, 외부표시 금지사항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우편번호는 문자로 적은 수취인의 주소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숫자로 바꾼 코드이다. 집배코드는 우편물의 구분·운송·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읽기 쉬운 문자와 숫자로 표시한 코드이다.

**핵심 구분**

우정사업본부의 통상우편물 외부표시 관련 기준에 따르면 집배코드는 총 9자리로 도착집중국 2자리, 배달국 3자리, 집배팀 2자리, 집배구 2자리로 구성된다. 통상우편물의 요금 감액을 받으려면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우체국과 협의되지 않은 우편요금 표시인영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모두 외부에 표시할 수 없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통상우편물의 요금 감액을 받으려면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옳다.

② X — 집배코드의 자리 수 배분을 바꾸어 적었다.
틀린 표현: 도착집중국 3자리, 배달국 2자리
올바른 표현: 도착집중국 2자리, 배달국 3자리이며, 집배팀 2자리와 집배구 2자리를 합하여 총 9자리이다.

③ X — 우체국과 협의되지 않은 우편요금 표시인영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도 기재할 수 없다.
틀린 표현: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기재할 수 없다.

④ X — 제시된 설명은 집배코드가 아니라 우편번호의 개념이다.
틀린 표현: 집배코드란 문자로 기재된 수취인의 주소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숫자로 변환한 것이다.
올바른 표현: 우편번호가 주소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숫자로 변환한 것이며, 집배코드는 우편물의 구분·운송·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읽기 쉬운 문자와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 오답 포인트

②에서는 총 9자리라는 사실만 보고 구성 순서를 놓치기 쉽고, ④에서는 우편번호와 집배코드의 정의를 뒤바꾸기 쉽다. ③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할 수 있다'는 표현도 외부표시 금지사항과 정반대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주소를 숫자로 변환'하면 우편번호, '구분·운송·배달용 정보'이면 집배코드로 판별한다. 이어 집배코드는 2·3·2·2의 총 9자리이고, 감액 우편물은 집배코드별로 구분 제출하며, 미협의 요금 표시인영과 고유식별정보는 표시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 암기 포인트

집배코드는 2·3·2·2, 감액은 집배코드별 구분 제출, 주민등록번호는 기재 금지이다.

NoteBase

문 2. 방문접수소포(우체국소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방문접수 신청은 가능하나, 요금수취인부담(요금 착불) 신청은 불가하다.

② 초소형 특정요금은 월 평균 10,000통 이상 발송업체 중 초소형 물량이 80%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③ 연합체 발송계약이란 계약자가 주계약 우체국을 지정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우편관서에서 별도의 계약 없이 계약소포를 발송하는 것이다.

④ 한시적 발송계약은 3개월 이내에 한시적으로 계약소포를 발송하는 것이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방문접수소포의 이용 방법, 초소형 특정요금의 적용 요건, 계약소포 발송계약의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연합체 발송계약과 다수지 발송계약의 차이, 한시적 발송계약의 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용어 풀이**

방문접수소포 = 발송인의 요청이나 사전계약에 따라 우체국 직원이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등기소포이다.
연합체 발송계약 = 일정 장소의 입주 사업자 또는 단체 회원들이 1개의 우편관서와 계약하고, 우편물을 한 장소에 모아 발송하는 계약이다.
다수지 발송계약 = 계약자가 주계약 우편관서를 지정해 계약한 뒤 여러 우편관서에서 별도 계약 없이 계약소포를 발송하는 계약이다.

**핵심 구분**

인터넷우체국에서는 방문접수소포 예약과 착불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초소형 특정요금은 월평균 10,000통 이상을 발송하면서 초소형 물량이 90% 이상인 업체에 적용할 수 있다. 연합체 발송계약은 여러 회원의 물량을 한 장소에 집하하는 방식이고, 주계약 우편관서를 정한 뒤 여러 우편관서에서 발송하는 방식은 다수지 발송계약이다. 이 문항이 출제된 당시 한시적 발송계약의 기간은 3개월 이내였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현재 시행 중인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26-19호와 현행 우편일반 기준에서는 이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변경되었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인터넷우체국으로 방문접수소포를 신청할 때 요금수취인부담인 착불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요금수취인 부담(요금 착불) 신청은 불가하다'
올바른 표현: 인터넷우체국에서 방문접수 신청과 요금 착불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② X
초소형 특정요금에서 요구하는 초소형 물량 비율은 80% 이상이 아니라 90% 이상이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초소형 물량이 80% 이상'
올바른 표현: 월평균 10,000통 이상 발송업체 중 초소형 물량이 90% 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③ X
주계약 우편관서를 지정하고 여러 우편관서에서 별도 계약 없이 발송하는 것은 연합체 발송계약이 아니라 다수지 발송계약이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연합체 발송계약이란'
올바른 표현: 다수지 발송계약이란 계약자가 주계약 우편관서를 지정해 계약하고 여러 우편관서에서 별도 계약 없이 계약소포를 발송하는 것이다. 연합체 발송계약은 일정 장소의 사업자 또는 단체 회원들이 1개의 우편관서와 계약하고 한 장소에 집하하여 발송하는 것이다.

④ O
이 문항의 출제 당시 기준으로 한시적 발송계약은 각종 행사 등을 위해 3개월 이내에 한시적으로 계약소포를 발송하는 계약이므로 옳다. 다만 현행 기준에서는 그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변경되었다.

### 오답 포인트

①의 '인터넷 신청 가능'만 보고 착불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거나, ②의 비율 80%와 90%를 혼동하기 쉽다. 또한 ③의 '주계약 우편관서·여러 우편관서'는 연합체가 아니라 다수지 발송계약의 표지이다. ④는 출제 당시 기준과 현행 기준의 기간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구분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용 방법은 '인터넷 예약과 착불이 모두 가능'으로 판단한다. 계약 유형은 '여러 구성원이 한 장소에 집하하면 연합체', '한 계약자가 여러 우편관서에서 발송하면 다수지'로 구분한다. 기간을 묻는 기출문제는 출제 당시 기준을 적용하되, 새 문항은 현행 한시적 발송계약 기간인 1개월 이내를 적용한다.

### 암기 포인트

착불 가능, 초소형 90%, 한곳 집하는 연합체, 여러 우체국 발송은 다수지이다. 한시적 발송계약은 기출 당시 3개월, 현행 1개월이다.

NoteBase

문 3. 선택등기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급대상은 2kg(특급 취급 시 30kg) 이하 통상우편물이다.

② 전자우편, 익일특급, 계약등기, 발송 후 배달증명 부가취급이 가능하나, 우편함에 배달이 완료된 경우에는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배달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이다.

④ 손실 또는 망실일 때 최대 5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제공하나, 배달이 완료된 후에 발생한 손실 또는 망실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선택등기의 취급대상, 부가취급, 배달기한 및 손해배상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일반등기처럼 대면배달을 시도하는 단계와 미배달 시 우편수취함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는 단계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선택등기 = 등기취급과 발송인의 반환 거절을 전제로 배달하되, 수취인에게 대면배달할 수 없으면 우편수취함 등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는 특수취급이다.
발송 후 배달증명 = 우편물의 배달일자와 수취인을 배달이 끝난 뒤 증명받는 부가취급이다.

**핵심 구분**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7까지에 따르면 선택등기는 먼저 등기 방식으로 배달하고,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으면 우편수취함 등에 투함하는 방식으로 배달한다. 선택등기는 익일특급과 발송 후 배달증명을 추가할 수 있지만, 우편수취함에 투함하여 수령인의 수령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송 후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없다. 현행 취급대상은 6*kg* 이하 통상우편물이고 특급 취급 시 30*kg*까지이며, 배달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이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에 따른 선택등기통상우편물의 손해배상 한도는 10만원이고, 실제 손해액이 더 적으면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취급대상을 2*kg* 이하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2*kg*(특급 취급 시 30*kg*) 이하
올바른 표현: 6*kg* 이하의 통상우편물이며, 특급 취급 시 30*kg*까지 가능하다.

② O
전자우편·익일특급·계약등기와 연계하거나 발송 후 배달증명을 부가할 수 있다. 다만 우편수취함에 투함한 경우에는 수령인의 수령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발송 후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③ X
선택등기는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이므로 배달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이다.
틀린 표현: 접수한 다음 날부터 4일 이내
올바른 표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이다.

④ X
배달 완료 뒤 발생한 손실 또는 망실이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최대 배상액을 5만원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최대 5만원
올바른 표현: 선택등기통상우편물의 손해배상 한도는 최대 10만원이며, 실제 손해액이 더 적으면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 오답 포인트

①의 2*kg*, ③의 4일, ④의 5만원은 각각 다른 우편서비스의 기준이나 과거 수치를 섞어 놓은 함정이다. 특히 ④는 배달 완료 후 손해의 제외라는 맞는 내용에 틀린 배상 한도를 결합하였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택등기 문항에서는 취급대상 6*kg*(특급 30*kg*), 배달기한 3일, 손해배상 한도 10만원을 먼저 확인한다. 이어 대면배달이 되었는지, 우편수취함 투함으로 배달이 완료되었는지를 구별하여 발송 후 배달증명과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선택등기는 '6kg·3일·10만원'이며, 우편함 투함 뒤에는 발송 후 배달증명과 이후 손해배상이 제한된다.

NoteBase

문 4. 선납 라벨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권장기간 경과로 인쇄 상태가 불량하거나 라벨지 일부 훼손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재출력이 가능하다.
ㄴ. 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판매정보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재출력이 가능하다.
ㄷ. 우편물 접수 시 우편요금보다 라벨 금액이 많은 경우 잉여 금액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다.
ㄹ. 구매 당일에 한해 판매우체국에서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선납 라벨의 재출력 요건과 구매 취소·환불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선납 라벨은 우편요금과 발행번호가 미리 부여된 라벨을 구매하여 우편물에 붙이는 서비스이다. 사용기간 경과나 일부 훼손으로 사용하기 어려워도 판매정보를 식별할 수 있으면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재출력할 수 있지만, 판매정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면 재출력할 수 없다. 실제 우편요금보다 라벨 금액이 많아도 차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구매 취소·환불은 구매 당일 영수증을 소지하고 판매우체국을 방문한 경우에 가능하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ㄴ이 틀려 옳은 문장만을 묶은 조합이 아니다. ㄴ의 '판매정보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재출력이 가능하다'가 틀린 표현이며, 판매정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면 재출력이 불가능하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다.
② O — ㄱ과 ㄹ이 모두 옳다. 사용기간 경과로 인쇄상태가 불량하거나 라벨 일부가 훼손된 경우에는 판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재출력할 수 있다. 구매 취소·환불은 구매 당일 영수증을 소지하고 판매우체국을 방문한 경우에 가능하다.
③ X — ㄴ과 ㄷ이 모두 틀린 문장이므로 옳은 문장 조합이 아니다. ㄴ은 판매정보를 식별할 수 없으면 재출력이 불가능하다고 고쳐야 하고, ㄷ은 실제 우편요금보다 라벨 금액이 많아도 차액을 환불하지 않는다고 고쳐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다.
④ X — ㄹ은 옳지만 ㄷ이 틀려 옳은 문장만을 묶은 조합이 아니다. ㄷ의 '잉여 금액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다'가 틀린 표현이며, 실제 우편요금보다 선납 라벨 금액이 많으면 차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다.

### 오답 포인트

'일부 훼손'과 '판매정보 식별 불가능'을 같은 훼손으로 처리하거나, 라벨 금액이 남으면 차액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재출력은 판매정보의 식별 가능 여부가 기준이고, 접수 때 생긴 차액은 환불 대상이 아니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출력 문제에서는 발행번호·바코드·요금 등 판매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본다. 환불 문제에서는 구매 자체의 취소인지, 실제 요금보다 라벨 금액이 커서 생긴 차액인지 구분한다. 구매 취소는 당일·영수증·판매우체국의 요건으로 판단하고, 차액은 환불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식별 가능하면 동일 번호·동일 금액 재출력, 식별 불가면 재출력 불가, 차액 환불 불가, 구매 취소는 당일 영수증을 가지고 판매우체국에서 처리한다.

NoteBase

문 5. 내용증명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문서 이외의 물건도 그 자체 단독으로 내용증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내용문서의 크기가 A4 용지 규격보다 큰 것은 발송할 수 없다.

③ 다수인이 연명으로 발송하는 내용문서의 경우 다수 발송인 중 1인의 이름, 주소를 우편물의 봉투에 기록한다.

④ 발송인이 재증명을 청구한 경우 문서 1통마다 재증명 청구 당시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전액을 징수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내용증명우편물의 취급 대상, 내용문서 규격, 연명 발송인의 봉투 기재 방법, 재증명 수수료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내용문서의 작성 원칙과 예외, 수수료 계산 기준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인이 제출한 문서의 원본과 등본이 서로 같은 내용임을 확인하여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재증명은 발송 후 보관된 등본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다시 증명받는 절차이다.

**핵심 구분**

우편법 시행규칙상 내용증명은 명료하게 작성된 문서에 한하여 취급하고, 내용문서는 원칙적으로 A4 크기의 기준용지로 작성한다. 다만 기준용지보다 큰 문서는 기준용지 크기로 접어서 매수를 계산한다.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발송할 때에는 연명자 중 1인의 성명·주소만 봉투에 기재한다. 재증명 수수료는 재증명 당시 내용증명 수수료의 전액이 아니라 반액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내용증명은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므로 문서 이외의 물건이 그 자체만으로 내용증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틀린 표현: 문서 이외의 물건도 그 자체 단독으로 내용증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문서 이외의 물건은 문서의 첨부물로 포함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 단독으로는 내용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X
내용문서는 원칙적으로 A4 크기의 기준용지로 작성하지만, 그보다 큰 문서는 기준용지 크기로 접어서 매수를 계산하므로 크다는 이유만으로 발송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 A4 용지 규격보다 큰 것은 발송할 수 없다.
올바른 표현: A4 용지 규격보다 큰 내용문서는 기준용지 규격으로 접어 매수를 계산하여 발송할 수 있다.

③ O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연명자 중 1인의 성명·주소만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한다. 이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④ X
재증명 수수료는 재증명 당시의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전액이 아니라 그 반액으로 계산한다.
틀린 표현: 문서 1통마다 재증명 청구 당시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전액을 징수한다.
올바른 표현: 재증명 수수료는 재증명 당시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반액으로 계산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A4보다 크면 발송 불가’라는 표현과 ④의 ‘수수료 전액’이라는 표현이 함정이다. 기준용지보다 큰 문서는 접어서 매수를 계산할 수 있고, 재증명 수수료는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용증명 문제에서는 취급 대상이 문서인지, 큰 용지의 처리 방법이 접어서 매수 계산인지, 연명 발송 시 봉투에 누구를 적는지, 재증명 수수료가 전액인지 반액인지를 각각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내용증명은 문서, 큰 용지는 접어서 계산, 연명 발송은 봉투에 1인, 재증명은 반액이다.

NoteBase

문 6. 국내우편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사전송(팩스) 우편은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ㄴ. 나만의 우표 홍보형 신청 시에는 기본 이미지 1종 외에 큰 이미지 1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ㄷ. 고객이 고객맞춤형 엽서를 교환 요청한 때에는 교환금액을 수납한 후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우표, 엽서, 항공서간으로 교환해 준다.
ㄹ. 우체국 축하카드 발송 시 5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화상품권을 함께 발송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내우편 부가서비스별 이용 가능 장소, 제공 범위, 교환 방법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모사전송(FAX)우편: 전국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우편취급국은 취급하지 않으며, 군부대 소재 우체국은 지정된 우체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나만의 우표 홍보형: 기본 이미지 1종 외에 큰 이미지 1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고객맞춤형 엽서 교환: 교환금액을 수납한 뒤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우표류로 교환한다.
우체국축하카드: 문화상품권을 50만원 한도까지 함께 발송하는 서비스로 볼 수 없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ㄷ은 옳지만 ㄱ의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모사전송(FAX)우편을 우편취급국에서는 취급하지 않으므로 옳은 조합은 ㄴ, ㄷ이다.
② X — ㄱ은 우편취급국도 가능하다고 한 점이 틀리고, ㄹ은 문화상품권을 50만원 한도까지 함께 보낼 수 있다고 한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우편취급국에서는 모사전송(FAX)우편을 취급하지 않고, 우체국축하카드에 문화상품권을 50만원 한도로 동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옳은 조합은 ㄴ, ㄷ이다.
③ O — ㄴ은 나만의 우표 홍보형의 이미지 제공 조건과 일치하고, ㄷ은 고객맞춤형 엽서의 교환금액 수납 및 액면금액 상당 우표류 교환 절차와 일치한다.
④ X — ㄴ은 옳지만 ㄹ의 '문화상품권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함께 발송'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우체국축하카드에 문화상품권을 50만원 한도로 동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옳은 조합은 ㄴ, ㄷ이다.

### 오답 포인트

ㄱ의 '모든 우체국'이라는 표현에서 우편취급국 제외 단서를 놓치기 쉽다. 또한 ㄹ은 '50만원'이라는 구체적 금액을 그럴듯하게 제시하여 축하카드 서비스의 실제 범위를 혼동하게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비스 문장은 '취급 장소의 예외', '무료 제공 범위', '교환 시 수납 여부와 교환 대상', '동봉 가능 품목과 한도'를 각각 확인한다. 조합형 선지는 ㄱ부터 ㄹ까지 먼저 O/X를 확정한 뒤 선택지의 조합과 대조한다.

### 암기 포인트

FAX는 우편취급국 제외, 홍보형은 큰 이미지 1종 무상, 맞춤형 엽서는 교환금액 수납 후 액면 우표류 교환이다.

NoteBase

문 7. 국내우편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요금별납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정한 우체국이나 우편취급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② 요금별납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않는다.

③ 최초 요금후납 계약일부터 체납하지 않고 4년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담보금 50% 면제 대상이다.

④ 모든 요금후납 계약자는 요금후납 계약국 변경 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내우편 요금별납의 취급 관서·우편날짜도장과 요금후납의 담보금 면제·계약국 변경 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요금후납 담보금의 50% 면제와 전액 면제에 필요한 무체납 기간을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요금별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여러 통의 우편물을 접수하면서 우표를 붙이는 대신 그 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요금후납은 우체국과 미리 계약한 이용자가 우편요금을 정해진 납부일에 사후 납부하는 방식이다.

**핵심 구분**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일반 기준상 요금후납 계약자가 최초 계약일부터 체납 없이 2년간 성실히 납부하면 담보금의 50%를 면제받고, 체납 없이 4년간 성실히 납부하면 담보금 전액을 면제받는다. 따라서 2년은 50% 면제, 4년은 전액 면제로 구분된다. 요금별납 우편물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정한 우편관서에서 취급하며, 원칙적으로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요금별납 우편물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한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취급 관서를 지방우정청장이 정한다는 점이 맞다.

② O — 요금별납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않는다. 다만 발송인이 접수일자를 표시하여 발송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X — 최초 요금후납 계약일부터 체납 없이 4년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담보금 50%가 아니라 전액 면제 대상이다.
틀린 표현: '4년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담보금 50% 면제 대상'
올바른 표현: '2년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담보금 50% 면제 대상이고, 4년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담보금 전액 면제 대상'이다.

④ O — 요금후납 계약국 변경 신청제도의 신청 대상은 모든 우편요금후납 계약이다. 계약자는 기존 계약우체국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인수 우체국의 업무 처리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변경이 처리된다.

**오답 포인트**

③의 '4년'과 '50%'를 한 묶음으로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면제 범위가 커지므로 2년은 50%, 4년은 전액이라는 단계 구조를 잡아야 한다. 또한 ②는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접수일자 표시를 원하는 경우의 예외가 있어도 옳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요금별납은 '취급 관서와 날짜도장'을, 요금후납은 '계약·담보·납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담보금 면제 선지는 계약일부터의 무체납 기간과 면제 비율을 짝지어 2년·50%, 4년·전액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후납 담보금은 2년 반, 4년 전부이다.

NoteBase

문 8. 다음 설명 중 서적우편물로 요금감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의 총 개수는?

ㄱ.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0쪽이며 책자 형태로 인쇄된 것
ㄴ. 우편엽서, 지로용지가 각각 1장씩 동봉된 것
ㄷ. 본지, 부록을 포함한 우편물 1통의 무게가 1kg인 것
ㄹ. 상품의 선전 및 광고가 전 지면의 20%인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서적우편물이 우편요금 감액을 받기 위한 내용·형태 요건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쪽수, 동봉물, 총중량, 광고 비율의 상한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서적우편물 요금감액은 일정한 발송 및 내용 요건을 갖춘 서적에 일반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해 주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우정사업본부의 서적우편물 요금감액 고시에 따르면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이어야 하고, 상품의 선전 및 광고가 전 지면의 10%를 초과하면 감액대상에서 제외된다. 우편엽서와 지로용지는 각각 1장씩 동봉할 수 있으며, 본지와 부록을 포함한 우편물 1통의 총중량은 1,200$g$을 초과할 수 없다.

ㄱ X: 표지를 제외한 40쪽은 48쪽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올바른 표현은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이다.

ㄴ O: 우편엽서와 지로용지는 각각 1장씩 동봉할 수 있다.

ㄷ O: 1$kg$은 총중량 상한인 1,200$g$ 이하이다.

ㄹ X: 광고가 전 지면의 20%이면 허용 상한 10%를 초과한다. 올바른 표현은 '상품의 선전 및 광고가 전 지면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감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은 ㄱ과 ㄹ의 2개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감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은 1개가 아니라 ㄱ과 ㄹ의 2개이다. 틀린 표현 '1개'는 '2개'로 고쳐야 한다.
② O: 감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은 ㄱ과 ㄹ로 모두 2개이므로 옳다.
③ X: 감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은 3개가 아니라 2개이다. 틀린 표현 '3개'는 '2개'로 고쳐야 한다.
④ X: 감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은 4개가 아니라 2개이다. 틀린 표현 '4개'는 '2개'로 고쳐야 한다.

### 오답 포인트

ㄱ의 40쪽을 기준인 48쪽과 혼동하거나, ㄷ의 1$kg$을 총중량 상한 1,200$g$보다 무겁다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 또한 ㄹ은 광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면의 10%를 초과할 때 제외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설명을 48쪽 이상, 동봉물 각각 1장, 총중량 1,200$g$ 이하, 광고 10% 이하의 네 기준과 차례로 대조한 뒤 기준을 위반한 항목만 센다.

### 암기 포인트

서적우편물 감액의 핵심 수치는 '48쪽·각 1장·1,200$g$·광고 10%'이다.

NoteBase

문 9. 우편사서함 사용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ㅇ 사서함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일 배달 예정물량이 ( ㉠ )통 이상인 다량이용자, 우편물 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구역인 신청자 순서로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 ㅇ 최근 3개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의 총 수량이 월( ㉡ )통에 미달한 경우,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ㅇ 사서함을 운영하고 있는 관서의 우체국장은 연( ㉢ )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계약 해지 대상자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 | ㉠ | ㉡ | ㉢ |
|---|---|---|---|
| ① | 50 | 30 | 1 |
| ② | 100 | 50 | 1 |
| ③ | 50 | 50 | 2 |
| ④ | 100 | 30 | 2 |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우편사서함 사용계약의 우선계약 기준, 사용계약 해지 기준, 운영 실태 점검 횟수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각 기준의 숫자 100통·30통·연 2회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우선계약 = 사서함 수가 부족한 경우 등에 일정한 신청자를 정해진 순위에 따라 먼저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계약 해지 = 정해진 해지 사유가 생기면 계약우체국장이 사서함 사용관계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NoteBase

### 핵심 구분

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다음으로 일일 배달 예정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이용자가 우선계약 대상이 된다. 같은 규칙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의 통수가 월 30통에 미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서함 운영관서의 우체국장은 연 2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계약 해지 대상자 등을 정비한다. 따라서 ㉠ 100, ㉡ 30, ㉢ 2가 옳다.

### 선지별 해설

① X
㉠을 50통, ㉢을 연 1회로 제시한 점이 틀리다.
틀린 표현: 50통·30통·연 1회
올바른 표현: 100통·30통·연 2회

② X
㉡을 월 50통, ㉢을 연 1회로 제시한 점이 틀리다.
틀린 표현: 100통·50통·연 1회
올바른 표현: 100통·30통·연 2회

③ X
㉠을 50통, ㉡을 월 50통으로 제시한 점이 틀리다. ㉢의 연 2회만 옳다.
틀린 표현: 50통·50통·연 2회
올바른 표현: 100통·30통·연 2회

④ O
우선계약 대상 다량이용자의 일일 배달 예정물량은 100통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계속하여 월 30통 미달이면 해지할 수 있으며, 운영 실태 점검은 연 2회 이상이므로 모두 옳다.

### 오답 포인트

우선계약 기준의 100통과 해지 기준의 월 30통을 서로 바꾸거나, 최근 3개월이라는 관찰기간을 월 통수와 혼동하기 쉽다. 또한 연 2회 이상인 운영 실태 점검 횟수를 연 1회로 착각하기 쉽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선계약은 일일 예정물량 100통 이상, 해지는 최근 3개월간 계속하여 월 30통 미달, 운영 점검은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사서함 숫자는 '우선 100·해지 30·점검 2'이다.

NoteBase

문 10. 우편물 운송용기의 종류와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운반대(평팔레트): 소포 등 규격화된 우편물 담기와 운반
② 소형우편상자: 소형통상우편물 담기
③ 대형우편상자: 얇은 대형통상우편물 담기
④ 특수우편자루: 부가취급우편물 담기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우편물 운송용기의 종류마다 어떤 우편물을 담고 운반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편물 운송용기는 우편물을 보호하고 차량 적재, 발송·도착, 운반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규격화된 용기이다.
우편운반대(평팔레트)는 소포 등 규격화된 우편물을 담아 운반하고, 우편상자는 우편물의 크기와 두께에 따라 소형·중형·대형으로 구분한다.
소형우편상자는 소형통상우편물, 중형우편상자는 얇은 대형통상우편물, 대형우편상자는 두꺼운 대형통상우편물을 담는다. 특수우편자루는 부가취급우편물을 담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우편운반대(평팔레트)는 소포 등 규격화된 우편물을 담고 운반하는 데 사용한다.
② O — 소형우편상자는 소형통상우편물을 담는 용기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대형우편상자: 얇은 대형통상우편물 담기'이다. 얇은 대형통상우편물은 중형우편상자에 담고, 올바르게는 '대형우편상자: 두꺼운 대형통상우편물 담기'이다.
④ O — 특수우편자루는 일반우편물과 구분하여 취급하는 부가취급우편물을 담는 용기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대형통상우편물'이라는 공통 표현만 보고 대형우편상자와 연결하기 쉽다. 대형통상우편물은 두께에 따라 나뉘며, 얇은 것은 중형우편상자에, 두꺼운 것은 대형우편상자에 담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편상자 선지는 우편물의 크기뿐 아니라 두께까지 확인한다. 소형통상은 소형상자, 얇은 대형통상은 중형상자, 두꺼운 대형통상은 대형상자로 대응시키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소형은 소형통상, 중형은 얇은 대형통상, 대형은 두꺼운 대형통상이다.

NoteBase

문 11. 손해배상 및 이용자 실비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설·추석 등 특수한 기간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늘어나 늦게 배달되는 경우에도 지연배달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② D(우편물 접수일)+1일 20시 이후 배달된 당일특급 우편물은 국내특급수수료만 손해배상한다.

③ EMS 우편물의 종·추적조사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 3일 이상 지연 응대한 경우에는 무료발송권(1회 3만원권)을 이용자 실비로 지급한다.

④ 이용자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우체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우편물의 지연배달 손해배상과 EMS 이용자 실비 지급의 요건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지연배달의 예외, 배상 범위, EMS 응대 지연에 대한 지급 내용, 신고기간의 기산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지연배달 손해배상은 정해진 송달 기준보다 늦게 배달된 경우 일정한 요금과 수수료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용자 실비 지급은 우편서비스 과정의 불편이나 응대 지연에 대해 문화상품권 또는 무료발송권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설·추석의 우편물 급증이나 천재지변 등은 지연배달 배상의 예외이다. 당일특급 우편물이 접수 다음 날 20시 이후 배달된 경우에는 국내특급수수료만이 아니라 우편요금과 국내특급수수료가 배상 범위가 된다. EMS 종·추적조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응대가 3일 이상 지연되면 1회 3만원권의 무료발송권을 지급한다.
이용자 실비 지급 신고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계산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설·추석 등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늘어나 지연된 경우는 지연배달 손해배상의 예외이므로 배상 대상이 아니다.
틀린 표현: '경우에도 지연배달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올바른 표현: 설·추석 등의 우편물 급증으로 지연배달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X
당일특급 우편물이 접수 다음 날 20시 이후 배달된 경우의 배상 범위는 국내특급수수료만이 아니라 우편요금과 국내특급수수료이다.
틀린 표현: '국내특급수수료만 손해배상한다'
올바른 표현: 우편요금과 국내특급수수료를 손해배상한다.

③ O
EMS 우편물의 종·추적조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응대가 3일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이용자 실비로 무료발송권 1회 3만원권을 지급한다.

④ X
이용자 실비 지급을 위한 15일의 신고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틀린 표현: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올바른 표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우체국에 신고해야 한다.

### 오답 포인트

③의 '3일 이상'과 '1회 3만원권'을 다른 EMS 보상 기준과 혼동하기 쉽다. 또한 ②는 '수수료만'이라는 지급 범위 축소가 함정이고, ④는 '발생한 다음 날부터'라는 기산점 변경이 함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간·금액·지급 범위가 제시된 선지는 숫자만 보지 않고 예외 사유, 지급 대상, 포함되는 요금과 수수료, 기간을 세는 첫날을 각각 분리하여 판단한다. EMS 응대 지연은 '3일 이상이면 무료발송권 1회 3만원권'으로 연결한다.

### 암기 포인트

EMS 응대 3일 지연은 3만원권, 실비 신고 15일은 발생일부터이다.

NoteBase

문 12. 우편물 운송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ㄱ. 감편: 우편물 감소로 운송편의 톤급을 하향 조정(예:4.5톤→2.5톤)
ㄴ. 거리연장: 운송구간에 추가로 수수국을 연장하여 운행함
ㄷ. 구간: 정해진 운송구간을 운송형태별(교환, 수집, 배집 등)로 운행함
ㄹ. 배집: 우편집중국 등에서 배달할 우편물을 배달국으로 보내는 운송형태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우편물 운송 용어인 감편·거리연장·구간·배집의 뜻을 구별하고, 옳은 설명의 개수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감편은 운송편의 운행 횟수, 즉 편수를 줄이는 것이다. 차량의 톤급을 낮추는 것은 감차에 해당한다.
거리연장은 기존 운송구간의 운행 거리를 늘리는 것이며, 수수구역 자체를 연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구간은 운송이 이루어지는 두 지점 사이의 범위이고, 편은 정해진 구간을 교환·수집·배집 등의 운송형태에 따라 실제로 운행하는 단위이다.
배집은 우편집중국 등에서 배달할 우편물을 배달국으로 보내는 운송형태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문장 판단

ㄱ X. 틀린 부분은 '감편'과 '톤급을 하향 조정'이다. 감편은 운송 횟수인 편수를 줄이는 것이고, 4.5톤 차량을 2.5톤 차량으로 낮추는 것은 감차이다.

ㄴ X. 틀린 부분은 '수수구역을 연장'한다는 표현이다. 거리연장은 수수구역의 확대가 아니라 기존 운송구간의 운행 거리를 늘리는 것이다.

ㄷ X. 틀린 부분은 제시된 설명을 '구간'이라고 한 것이다. 구간은 운송이 이루어지는 두 지점 사이를 뜻하며, 정해진 구간을 교환·수집·배집 등의 형태로 운행하는 단위는 편이다.

ㄹ O. 배집은 우편집중국 등에서 배달할 우편물을 배달국으로 보내는 운송형태이므로 옳다.

선택지 판단

① O. 옳은 문장은 ㄹ 하나이므로 총 1개이다.

② X. '2개'가 틀렸으며, 올바른 개수는 1개이다.

③ X. '3개'가 틀렸으며, 올바른 개수는 1개이다.

④ X. '4개'가 틀렸으며, 올바른 개수는 1개이다.

### 오답 포인트

ㄱ의 차량 톤급 하향을 감편으로 착각하기 쉽다. '편'은 운행 횟수, '차'는 투입 차량을 가리킨다는 차이를 잡아야 한다. 또한 ㄷ은 구간과 편의 정의를 바꾸어 놓았고, ㄴ은 운행 거리와 수수구역을 혼동하게 만든 표현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문장을 O/X로 판정한 뒤 O의 개수를 센다. 용어에서는 편수 변화인지, 차량 변화인지, 운행 거리 변화인지, 운송 지점 사이의 범위인지, 배달국으로 보내는 흐름인지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 암기 포인트

감편은 편수 감소, 감차는 차량 하향, 구간은 두 지점 사이, 배집은 배달국으로 보내기이다.

NoteBase

문 13. 우편물 발착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착업무의 처리과정은 분류·정리, 구분, 발송, 도착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분류·정리작업은 구분이 완료된 우편물을 보내기 위한 송달증 생성, 체결, 우편물 적재 등의 작업이다.

③ 주소와 우편번호 주위에 다른 문자가 표시된 우편물은 기계 구분이 불가능한 우편물이다.

④ 소포우편물을 우편운반차에 적재할 때는 수취인 주소가 기재된 앞면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적재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우편물 발착업무의 처리 순서와 각 단계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분류·정리 — 접수된 우편물을 다음 처리에 맞게 분류하고 정리하는 단계이다.
2. 구분 — 우편물을 보내야 할 방향이나 배달 구역 등에 따라 나누는 단계이다.
3. 발송 — 구분이 끝난 우편물의 송달증을 생성하고 우편물을 체결·적재하여 보내는 단계이다.
4. 도착 — 운송되어 온 우편물을 인수하여 도착 처리하는 단계이다.

구분이 끝나야 발송 대상과 행선이 확정되므로, 구분 완료 우편물의 송달증 생성·체결·적재는 분류·정리가 아니라 발송 단계의 작업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발착업무는 분류·정리, 구분, 발송, 도착 작업으로 구성되므로 제시된 처리과정이 맞다.

② X — '분류·정리작업'이라는 작업명이 틀렸다. 송달증 생성, 체결, 우편물 적재는 구분이 완료된 우편물을 실제로 보내기 위한 발송 작업이다. 올바르게는 '발송작업은 구분이 완료된 우편물을 보내기 위한 송달증 생성, 체결, 우편물 적재 등의 작업이다'라고 해야 한다.

③ O — 주소와 우편번호 주변에 다른 문자가 표시되면 기계가 주소·우편번호 정보를 정확히 판독하기 어려우므로 기계 구분이 불가능한 우편물에 해당한다.

④ O — 소포우편물을 우편운반차에 적재할 때는 수취인 주소가 기재된 앞면이 위쪽을 향하도록 적재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 오답 포인트

②는 구분 완료 뒤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발송 준비 작업을 제시하면서 그 명칭만 '분류·정리작업'으로 바꾼 선지이다. 작업 내용이 익숙해 보여도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착업무는 '분류·정리 → 구분 → 발송 → 도착'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특히 '구분 완료 우편물을 보내기 위한 송달증 생성·체결·적재'가 나오면 발송 단계로 연결한다.

### 암기 포인트

분류하고 구분한 뒤 발송하며, 운송된 우편물은 도착 처리한다. 송달증·체결·적재는 발송의 핵심어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우편 업무 관련 국제연합체는?

> ○ 2002년 아시아·태평양 연안 지역 6개 국가로 결성, 2021년 12월 현재 한국 포함 11개 국가로 구성
> ○ 공동으로 구축한 단일 네트워크 기반 및 'The Power to Deliver'라는 슬로건 하에 활동

① Universal Postal Union
② Asian Pacific Postal Union
③ World Logistics Organization
④ Kahala Posts Group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200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6개 우정사업자가 구축한 네트워크와 'The Power to Deliver'라는 슬로건을 단체 명칭에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Kahala Posts Group(KPG)은 여러 국가의 우정사업자가 국제우편 서비스 향상과 공동 협력을 위해 구성한 국제 우편 네트워크이다. 제시문의 핵심 식별어는 '2002년', '아시아·태평양 연안 지역 6개 국가', '2021년 12월 현재 11개 국가', 'The Power to Deliver'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Universal Postal Union은 제시문이 가리키는 단체명이 아니다. 이 선지는 전 세계 우편 분야의 보편적 국제기구 명칭과 특정 우정사업자들이 만든 협력 네트워크를 혼동한 것이다. 틀린 표현 ‘Universal Postal Union’은 ‘Kahala Posts Group’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Asian Pacific Postal Union은 제시문의 2002년 결성, 6개 국가의 단일 네트워크, ‘The Power to Deliver’라는 식별 단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Asian Pacific Postal Union’은 ‘Kahala Posts Group’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World Logistics Organization은 제시문이 설명하는 우정사업자 연합의 명칭이 아니다. 제시문은 일반적인 세계 물류 조직이 아니라 우정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특정 우편 네트워크를 설명한다. 틀린 표현 ‘World Logistics Organization’은 ‘Kahala Posts Group’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Kahala Posts Group은 2002년 아시아·태평양 연안 지역의 6개 국가로 결성되었고, 제시된 시점에 한국을 포함한 11개 국가로 구성되었으며, ‘The Power to Deliver’라는 슬로건 아래 활동한다. 제시문의 모든 식별 단서와 일치한다.

### 오답 포인트

①과 ②에는 ‘Postal Union’이 들어 있어 우편 관련 단체처럼 보이고, ③은 물류 전반을 포괄하는 이름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문항은 일반적인 활동 분야가 아니라 결성 연도, 최초 구성 국가 수, 제시 시점의 구성 국가 수, 고유 슬로건이 함께 일치하는지를 묻는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연합체를 묻는 문항에서는 설립 연도와 지역만 보지 않고 회원 구성 및 고유 슬로건까지 묶어 대조한다. ‘2002년·아시아태평양 6개 국가·11개 국가·The Power to Deliver’가 함께 제시되면 Kahala Posts Group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KPG는 ‘2002년 6개국 출발, 2021년 11개국, The Power to Deliver’로 연결한다.

NoteBase

문 15. 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편자루배달 인쇄물의 등기취급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역과 유럽, 아시아 등 만국우편연합 회원국가 간 발송에 제한이 없다.

② 시각장애인이나 공인된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발송하는 공무를 위한 모든 우편물은 시각장애인용우편물로 취급 가능하다.

③ 소형포장물은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서류 동봉이 가능하며, 내용품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단히 밀봉하여야 한다.

④ 보험소포의 보험가액은 'Insured Value-words 보험가액-문자' 칸과 'Figures 숫자' 칸에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원화(KRW) 단위로 기재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취급 요건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우편자루배달 인쇄물의 등기 가능 범위,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의 내용품 요건, 소형포장물의 봉함 방식, 보험소포의 보험가액 표기 방식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우편자루배달 인쇄물(M bag)은 동일한 발송인이 동일한 수취인에게 신문·서적·잡지 등의 인쇄물을 한꺼번에 보내는 우편물이다.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은 점자 자료나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자료·용품 등 정해진 내용품 요건을 충족한 우편물이다. 보험소포는 발송인이 신고한 가액을 한도로 보험 취급하는 국제소포이다.

**핵심 구분**

현행 우정사업본부 안내와 만국우편연합(UPU) 협약 규칙에 따르면, 보통 우편자루배달 인쇄물은 어느 나라든 보낼 수 있지만 등기 취급 국가는 제한된다.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은 발송인의 신분이나 공무 목적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품과 발송·수취 관계가 정해진 요건에 맞아야 한다. 소형포장물은 현재적·개인적 통신문 성격의 서류를 일정한 조건 아래 넣을 수 있지만 특별한 봉함 조건은 없고 내용 검사를 위해 열 수 있어야 한다. 보험가액은 발송국 통화로 표시하며 영문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사용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우편자루배달 인쇄물의 보통 취급과 달리 등기 취급은 모든 UPU 회원국에 제한 없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취급 국가가 제한된다.
틀린 표현: '만국우편연합 회원국가 간 발송에 제한이 없다'
올바른 표현: '보통 우편자루배달 인쇄물은 어느 나라든 보낼 수 있으나, 등기 취급은 가능한 나라가 제한된다.'

② X
시각장애인이나 공인된 시각장애인 기관이 발송한다는 사실만으로 공무를 위한 모든 우편물이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점자 자료, 시각장애인용 녹음물·용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용품 등 정해진 내용품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틀린 표현: '공무를 위한 모든 우편물'
올바른 표현: '정해진 내용품 요건과 발송·수취 요건을 충족하는 우편물만 시각장애인용 우편물로 취급할 수 있다.'

③ X
소형포장물에는 현재적·개인적 통신문 성격의 서류를 일정한 조건 아래 동봉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봉함 조건은 요구되지 않으며 내용품 검사를 위해 열 수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단단히 밀봉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틀린 표현: '단단히 밀봉하여야 한다'
올바른 표현: '내용품이 운송 중 빠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하되, 내용 검사를 위해 열 수 있도록 한다.'

④ O
보험가액은 발송국의 통화로 표시하고 문자 부분은 영문으로, 숫자 부분은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다.
대한민국에서 발송하는 보험소포이므로 원화(KRW) 단위로 'Insured Value-words' 칸과 'Figures' 칸에 각각 기재한다.

### 오답 포인트

①의 '보통 발송 가능 국가'와 '등기 취급 가능 국가'를 같다고 보는 것, ②의 발송 주체만 보고 내용품 요건을 빠뜨리는 것, ③의 안전한 포장을 반드시 밀봉해야 한다는 뜻으로 확대하는 것이 함정이다. 특히 ③은 서류 동봉 가능 여부와 봉함 방식을 분리하여 판단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우편물의 종류별 문제에서는 발송 대상 국가, 발송 주체, 내용품, 포장·봉함, 외부 표기 요건을 각각 나누어 확인한다. '모든', '제한이 없다', '반드시'와 같은 단정 표현이 보이면 예외나 별도 취급 조건이 있는지를 먼저 대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M bag 등기는 국가 제한, 시각장애인용은 내용품 요건, 소형포장물은 검사 가능, 보험가액은 영문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 병기이다.

NoteBase

문 16. 국제우편물 사전통관정보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HS코드는 10자리이며, 그중 앞자리 6개 숫자는 국제 공통 분류에 해당한다.

②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우체국이 적용 대상 관서이다.

③ 대상우편물은 EMS(비서류), 항공소포, 소형포장물, K-Packet으로 한정하며, 포스트넷 입력은 숫자 이외의 문자는 모두 영문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④ 대상국가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39개국이다.

**정답 3번**

### 쟁점

이 문제는 국제우편물 사전통관정보제공의 대상 관서·대상 우편물·대상 국가와 입력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열거된 우편물에서 선편소포가 빠졌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용어 풀이

사전통관정보제공은 국제우편물이 도착국에 도착하기 전에 발송인·수취인과 내용품 등의 통관 정보를 EDI 방식으로 상대국 우정 및 관세당국에 보내는 제도이다.
HS코드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을 분류하는 품목분류번호이다.

### 핵심 구분

이 문항의 출제 당시 대상 관서는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우체국이다. 대상 우편물에는 EMS 비서류, 항공소포, 선편소포, 소형포장물, K-Packet이 포함된다. 따라서 선편소포를 빼고 네 종류로만 한정한 설명은 틀리다. 포스트넷에는 숫자를 제외한 문자를 영문으로 입력한다는 부분은 옳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우리나라의 HS코드는 10자리이고, 앞의 6자리는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분류번호이므로 옳다.

② O — 사전통관정보제공의 대상 관서는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우체국이므로 옳다.

③ X — ‘EMS(비서류), 항공소포, 소형포장물, K-Packet으로 한정’한 부분은 선편소포를 누락했으므로 틀리다. 포스트넷에서 숫자 이외의 문자를 영문으로 입력한다는 부분은 옳다.
틀린 표현: 대상 우편물은 EMS(비서류), 항공소포, 소형포장물, K-Packet으로 한정한다.
올바른 표현: 대상 우편물에는 EMS(비서류), 항공소포, 선편소포, 소형포장물, K-Packet이 포함된다.

④ O — 이 문항의 출제 당시 대상 국가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을 포함한 39개국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은 한 문장에 대상 우편물과 입력 방식이라는 두 정보를 묶어 두었다. 뒤의 영문 입력 원칙이 맞더라도 앞의 열거에서 선편소포가 빠졌으므로 선지 전체는 틀리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상 우편물 열거형 선지는 항공소포와 선편소포를 한 쌍으로 확인한다. 한 선지에 여러 사실이 결합되어 있으면 각 절을 따로 판정하고, 어느 한 절이라도 틀리면 선지 전체를 X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소포는 항공만이 아니라 선편도 대상이다. ③의 함정은 선편소포 누락이다.

NoteBase

문 17. 국제소포우편물 접수 시 기표지(운송장)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착국가에서 배달불능 시, 발송인이 우편물을 돌려받지 않길 원할 경우 '□ Treat as abandoned 포기'를 선택하여 ∨ 또는 × 표시한다.

② 항공우편물의 Actual weight 실중량, Volume weight 부피중량, 요금, 접수우체국명/접수일자 등을 접수 담당자가 정확하게 기재한다.

③ 중량기재 시 보통소포는 100g 단위로 절상하고, 보험소포는 10g 단위로 절상하여야 한다.

④ 보험소포의 보험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정정이 가능하나, 이후에 잘못 기재한 경우는 기표지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소포우편물 접수 시 기표지(운송장)의 배달불능 처리 지시, 중량·요금 기재, 중량 절상 단위 및 보험가액 오기 처리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실중량(Actual weight)은 저울로 잰 실제 무게이고, 부피중량(Volume weight)은 우편물의 부피를 무게로 환산한 값이다.
절상은 정해진 단위에 미달하는 나머지를 다음 단위까지 올려 기록하는 것이다.

**핵심 구분**

현행 우정사업본부 우편일반 학습교재의 국제소포 접수 기준에 따르면 보통소포 중량은 100*g* 단위, 보험소포 중량은 10*g* 단위로 절상한다. 항공소포는 실중량과 부피중량을 모두 기록하고 두 중량 중 큰 쪽을 요금에 적용한다. 보험가액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기표지에서 지우거나 정정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새 기표지를 작성해야 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발송인이 배달불능 우편물을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Treat as abandoned(포기)’를 선택하여 ∨ 또는 ×로 표시한다.

② O
항공우편물은 접수 담당자가 실중량과 부피중량을 기록하고, 요금과 접수우체국명·접수일자 등도 정확히 기재한다. 실중량과 부피중량 중 큰 쪽의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한다.

③ O
보통소포는 100*g* 미만의 단수를 100*g* 단위로, 보험소포는 10*g* 미만의 단수를 10*g* 단위로 절상한다.

④ X
보험가액은 1회라도 지우거나 정정할 수 없으므로 ‘1회에 한하여 정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보험가액은 1회에 한하여 정정이 가능하다.
올바른 표현: 보험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지우거나 수정하지 않고 기표지(운송장)를 새로 작성한다.

### 오답 포인트

④의 함정은 ‘한 번 정도는 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다. 보험가액은 정정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표지상 수정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잘못 적은 즉시 새 기표지를 작성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표지 문항에서는 먼저 누가 기재하는지, 중량을 어떤 단위로 절상하는지, 오기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판단한다. 보험가액 오기와 ‘정정 가능’이 함께 제시되면 수정 불가와 기표지 재작성 원칙을 적용한다.

### 암기 포인트

보통소포 100*g*, 보험소포 10*g*, 보험가액 오기는 수정 없이 새 기표지이다.

NoteBase

문 18. 국제우편 K-Packe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우편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 전자상거래용 국제우편서비스이다.

② EMS와 같은 경쟁서비스이며 고객맞춤형 국제우편서비스로서 평균송달기간은 5~6일이다.

③ 'L'로 시작하는 우편물번호를 사용하며, 1회 배달 성공률 향상을 위해 해외우정당국과 제휴하여 발송인 서명 없이 배달하기로 약정한 국제우편서비스이다.

④ 제휴(서비스)국가는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여 정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K-Packet의 근거, 서비스 성격, 송달기간, 배달 방식 및 제휴국가 결정 주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K-Packet은 온라인으로 접수한 2kg 이하 소형물품을 일부 해외 우정당국과의 제휴에 따라 배송하는 전자상거래용 국제우편서비스이다. 종추적은 가능하지만 배달할 때 수취인의 서명은 받지 않는다.

**핵심 구분**

K-Packet 자체는 국제우편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서비스이고, K-Packet의 제휴(서비스)국가는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로 정한다. 또한 EMS와 같은 선택적우편서비스이며, 우편물번호는 'L'로 시작하고 수취인 서명 없이 배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K-Packet을 고시한 주체를 우정사업본부장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 전자상거래용 국제우편서비스'
올바른 표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상거래용 국제우편서비스'이다.

② X
K-Packet은 EMS와 같은 선택적우편서비스인데 이를 경쟁서비스라고 했고, 평균송달기간을 5~6일이라고 한 것도 틀렸다. 출제 기준의 평균송달기간은 7~10일이며, 현행 우체국 공식 안내는 통관에 계류되지 않은 주요 도시의 배달소요일수를 4~7일 이내로 안내한다.
틀린 표현: '경쟁서비스', '평균송달기간은 5~6일'
올바른 표현: '선택적우편서비스'이며, 출제 기준의 평균송달기간은 '7~10일'이다.

③ X
'L'로 시작하는 우편물번호를 사용하는 점은 맞지만, 서명 없이 배달받는 주체는 발송인이 아니라 수취인이다.
틀린 표현: '발송인 서명 없이 배달'
올바른 표현: '수취인 서명 없이 배달'이다.

④ O
K-Packet의 제휴(서비스)국가는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로 정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④는 모두 '고시 주체'를 묻지만 대상이 다르다. K-Packet이라는 서비스 자체의 고시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고, 제휴(서비스)국가의 고시 주체는 우정사업본부장이다. 또한 ③의 '발송인'은 익숙하게 지나치기 쉬우나 정확한 표현은 '수취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K-Packet 선지는 '서비스 자체의 고시 주체', '제휴국가의 고시 주체', '선택적우편서비스', 'L로 시작하는 번호', '수취인 무서명 배달'을 각각 분리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K-Packet은 장관이 고시하고, 제휴국가는 본부장이 고시하며, L번호로 수취인 서명 없이 배달한다.

NoteBase

문 19.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접수대상 우편물은 EMS, 국제소포, 등기소형포장물이다.

②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물 종별에 관계없이 스마트 접수 요금할인이 5% 적용된다.

③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 우편물 중 대상우편물에 따라 방문(픽업) 접수가 가능한 우편물과 그렇지 못한 우편물이 있다.

④ 국제우편 접수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이용고객의 편의증진 및 접수창구요원의 접수부담 경감에 기여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국제우편 스마트접수의 대상 우편물, 접수 방식, 요금 할인 방식과 도입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제우편 스마트접수는 발송인이 인터넷이나 앱으로 국제우편물의 접수정보를 미리 입력한 뒤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거나, 허용되는 우편물은 방문접수를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대상에는 EMS, 국제소포, 등기소형포장물이 포함되며, 방문접수 가능 여부와 할인 적용은 우편물의 종류와 이용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EMS, 국제소포, 등기소형포장물은 국제우편 스마트접수 대상에 포함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우편물 종별에 관계없이'와 '5%'이다. 스마트접수 할인은 모든 국제우편물에 일률적으로 5%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우편물의 종류와 이용 조건에 따라 할인 적용 여부와 할인율이 달라진다.

③ O — 스마트접수 대상이라도 방문접수 가능 여부는 종별로 다르다. EMS는 방문접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국제소포와 등기소형포장물은 우체국 창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④ O — 인터넷·앱을 통한 사전정보 입력과 창구 제출·방문접수의 구분은 접수 경로를 다양화한다. 이에 따라 고객의 편의가 높아지고 창구에서 정보를 다시 입력하는 업무가 줄어 접수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스마트접수이면 모두 같은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일반화한 것이 함정이다. 스마트접수 가능 여부, 방문접수 가능 여부, 할인 조건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한꺼번에 동일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스마트접수 문항에서는 대상 종별, 제출 방식, 방문접수 가능 종별, 할인 조건을 각각 나누어 판단한다. '종별에 관계없이', '모두', '일률적으로'와 같은 표현이 나오면 예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스마트접수는 정보는 미리 입력하고, 제출·방문 가능 여부와 할인은 종별·조건별로 구분한다.

NoteBase

문 20. 국제회신우표권(IR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ㄱ. 수취인의 회신요금 부담 없이 외국으로부터 회답을 받는 제도이다.
ㄴ. 만국우편연합 총회가 개최되는 매 4년마다 총회 개최지명으로 발행한다.
ㄷ. 만국우편연합 관리이사회(CA)에서 발행하며 각 회원국에서 판매한다.
ㄹ. 현재 필요한 상태에 있지 않으면서 다량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판매제한과 거절사유에 해당된다.
ㅁ. 국제회신우표권 판매 시 교환개시일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한다.
ㅂ. 우리나라에서는 1,450원에 판매하고, 교환은 850원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국제회신우표권의 목적, 발행 주체, 판매 제한, 교환 안내 및 우리나라의 판매·교환 금액을 구분하여 옳은 문장의 수를 세는 문제이다.

NoteBase

### 핵심 개념

국제회신우표권은 외국의 수취인이 회신에 필요한 우표를 현지 우체국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발송인이 미리 보내는 증표이다.
ㄱ O: 수취인이 회신 우편요금을 따로 부담하지 않고 외국의 발송인에게 회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ㄴ O: 국제회신우표권은 만국우편연합 총회 주기에 맞추어 발행되며, 해당 모델에는 총회 개최지명이 붙는다.
ㄷ X: 틀린 표현은 '관리이사회(CA)에서 발행'이다. 국제회신우표권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이 발행하여 판매에 참여하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각 지정우편사업자가 판매한다.
ㄹ O: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다량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투기적·비정상적 구매를 막기 위한 판매 제한 또는 거절 사유가 된다.
ㅁ X: 틀린 표현은 '교환개시일'이다. 판매할 때에는 교환할 수 있는 유효기간, 즉 교환만료일을 정확히 안내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우표권은 교환할 수 없다.
ㅂ O: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회신우표권을 1,450원에 판매하며, 외국에서 판매된 우표권은 항공보통서장 4지역 20g 요금인 850원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ㄹ, ㅂ의 4개이다.

### 선지별 해설

① X: 3개가 아니다. 옳은 문장은 ㄱ, ㄴ, ㄹ, ㅂ이므로 모두 4개이다. 올바른 개수는 4개이다.
② O: 옳은 문장 ㄱ, ㄴ, ㄹ, ㅂ을 세면 4개이므로 맞다.
③ X: 5개가 아니다. ㄷ은 발행 주체가 잘못되었고 ㅁ은 안내해야 할 날짜를 교환개시일로 잘못 표현했으므로 옳은 문장은 4개이다.
④ X: 6개가 아니다. ㄷ과 ㅁ이 틀렸으므로 올바른 개수는 4개이다.

### 오답 포인트

ㄷ의 '관리이사회'와 ㅁ의 '교환개시일'을 익숙한 공식 용어처럼 받아들이면 5개나 6개로 잘못 세기 쉽다. 발행 주체는 국제사무국이고, 판매 시 확인할 날짜는 교환만료일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문장을 개별적으로 O/X 판단한 뒤 O인 문장만 센다. 국제회신우표권 문제에서는 '국제사무국 발행·지정우편사업자 판매', '유효기간 안에 교환', '국내 판매가와 교환가의 구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IRC는 국제사무국이 발행하고, 총회 개최지명을 붙이며, 교환개시일이 아니라 교환만료일을 확인한다. 이 문항의 O는 ㄱ·ㄴ·ㄹ·ㅂ, 총 4개이다.

NoteBase